



국내·외 축산소식



병원성 미생물 검사 사료업계 ‘발끈’

돼지소모성질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농림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돼지 유래단백질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료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6월부터 3개월간 배합사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논의하자는 배합사료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사료업계는 현행 아플라톡신류와 오클라톡신외에 제랄레논, 보미톡신도 검사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농림부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설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료업계는 질병의 원인을 사료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시행 등 훨씬 강력하게 위생 및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사료 및 원료에 대한 검정항목을 확대하거나 돼지 유래단백질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도 업계와 충분

한 협의를 거친 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거세 고급육 ‘필요’ 아닌 ‘필수’

한우농가들 사이에서 한우고급육 생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급육과 저급육의 가격차가 심화되면서 비거세우 사육농가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와 달리 꾸준히 거세고급육 생산에 매진해온 농가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 4월까지 한우의 종별 출하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13만8천977두 가운데 거세우는 3만4천747두, 비거세우는 5만3천8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세율은 39.59%에 불과해 거세 생산의 비중이 더욱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재 한우협회강원도지회장은 “비거세우가 거세우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아 자금회전이 빠른 매력 있어 아직 현장에서 비거세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고급육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빨리 거세 고급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종부로 전업되는 부루세라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거세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에서 1993년부터 한우 거세우를 사육해 현재 비육우 1천80여두 규모를 자랑하는 금성농장의 엄재선 대표는 "고급육 사육을 일찍 시작한 것이 당시로서는 큰 모험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지금 출하되는 소들은 최소 1~2년전에 입식된 것들로 당시에는 비거세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송이지 시장을 나가보면 거세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 현장에서 거세 고급육 생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안성마춤 한우회장인 우영목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한우가격이 불안해 비거세로 빠르게 출하하는 것이 농가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육과 차별화를 이뤄야하는 상황에서 거세율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거세 장려금이나 품질고급화 장려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거세 고급육 생산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서 "미국 쇠고기 작업장 37곳의 방문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수출승인 대상 작업장을 내달 7일 발표할 것"이라며 "내달 하순께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출승인 작업장이 발표되면 즉각 미국에 통보돼 미국측이 수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재개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5월6~21일 검역관 8명을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에 보내 작업장 위생관리와 광우병 관련 위생안정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박 국장은 "조사대상 가운데 30개월 미만 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같은 도구로 절단하는 곳이 포함돼 있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여러군데 있었다"며 작업장 일부는 수출허용 대상에서 탈락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국장은 "6월7일 수출 허용 작업장을 선정, 미국에 통보하면 쇠고기가 배에 선적돼 6월 하순께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징적인 양을 비행기를 통해 들여온다면 당일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미국은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나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 주체도 우리가 승인한 쇠고기 작업장에 한정된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7일 재개

미국산 쇠고기가 7일 수입 재개돼 이달 하순께에는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5월29일 정례브리핑에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FTA와 연계 안시킨다

-미국 상원 전면수입 요구, 정부 공식입장으로
불 수 없어



국내·외 축산소식

-내달초 미국 작업장 점검결과 발표 예정

농림부는 미국 상원의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절대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5월29일 밝혔다.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FTA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계돼선 안된다고 본다"며 "미국 의회가 어떤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양국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합의를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뼈와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으로 수입 재개를 합의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특히 "앞으로 미국 각계각층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 정부도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국장은 "우리 점검단 8명이 2주일간 미국내 37개 작업장을 점검했고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작업장을 승인할지 마무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는 내달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전반적으로 미국 도축장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곳도 발견돼 이미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미국 작업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daily]



축산업계, 농림부 한·미FTA협상 초안 끝까지 고수 여부 '촉각'

농림부는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관련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도 논의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농림부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농림부는 5일부터 9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가능성이 높은 육우,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닭고기, 낙농품(분유, 치즈 등)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로 분류했으나 민감도가 중간단계이고 대미 수입실적이 많지 않은 식용설육, 육가공품, 장·위, 조란, 천연꿀 등은 관세일부품목(20~50%)으로 분류했다.

산동물(돼지, 닭, 오리, 꿀벌 등), 양고기, 칠면조고기, 요구르트, 오리고기, 가금류(냉장), 난류, 난백, 녹용, 녹각 등은 3~10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관세화하고, 중축, 사료원료, 조사료, 동물성유지, 빙과류, 원피 등은 즉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했다.

농림부는 협정문 초안에 수입급증에 대비, 특별긴급관세 등 적절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의 경우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생 및 검역(SPS)과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 등 기존 국제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WTO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측 협정문과 미국측 협정문과는 내용이 크게 달라 앞으로 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타 품목을 지키기 위해 혹시 협상과정에서 빠짐으로써 UR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5월25일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주제로 열린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한·미 FTA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 할 경우 피해 예상 규모를 소 3천6백억원, 돼지 2천3백억원, 닭 1천2백억원, 낙농 6백억원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피해 예상치가 매우 축소됐으며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식 팀장(농협중앙회)은 미국에서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도 어떻게 더 낮을 수가 있냐며 낙농분야에만도 대략 6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품목별·산업별로 관세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경쟁 가능한 브랜드화, 고품질화된 축산업을 비전으로 제시(소 : 1등급 출현

율 70%)하고, 축종별로 일류 브랜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돼지와 닭은 축사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면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낙농품은 시장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FTA 관련 재원과 촉발기금을 함께 활용하되, FTA 관련 재원은 생산부문 현대화와 규모화 등에 활용하고, 촉발기금은 생산이후 유통구조 현대화와 위생수준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에 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자금 융자지원 방식도 개편하는 한편 농지규제 완화와 가축위탁사육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드러난 미국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예상대로 '초강수'

우리나라와 미국은 5월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하지만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의 주요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과는 달리 미국 측 내용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와 관련, 농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초안의 일부 내용이 워낙 민감해 자칫 한·미 FTA 체결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측 초안 어떤 내용일까=정부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암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



국내·외 축산소식

볼 수밖에 없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5월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보내온 초안에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SSG(특별긴급관세)·TRQ(저울관세할당제도)·SPS(위생 및 검역조치) 문제 등은 양국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발동하는 SSG와 관련, 배국장은 “우리는 대상 품목과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을 두지 말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지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SSG에 대한 구체적 품목과 발동요건을 명시했었다”고 밝혀 미국 측 초안에 SSG 발동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저울관세를 물리는 TRQ에 대해 배국장은 “TRQ 운용의 재량폭을 넓히기 위해 원칙적인 조건만 제시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했다”고 말해 현재 콩 등을 들여올 때 적용하는 국영무역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배 국장은 “우리는 양국 간 SP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순한 접촉창구를 두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SPS위원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 하자는 입장”이라며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협상 목표”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기된 현안들**=최근 일부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출 및 국내 보조금을 받는 미국산 농산물의 보조금 감축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 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수출보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더욱이 우리는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포장비 등 수출 물류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수출보조금을 줄이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는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보조금의 경우 미국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어 보조금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액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이 보조금을 똑같은 비율로 줄일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상일정**=한국 정부는 농업·금융서비스 등 모두 22개 장으로 구성된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5월20일 미국 측과 교환했다. 정부는 미국 측 협정문 초안의 개괄적 내용과 협상단의 향후 협상 방향을 조만간 국회와 농민단체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김종훈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대표단 130명은 3일 워싱턴으로 출발, 5~9일 FTA 1차 본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또 7월10~14일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열어 개방 대상품목 및 품목별 관세인하 수준 등 양허안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3~5차 협상은 9·10·12월에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방침이다.

[농민신문]



구제역 긴급지원자금 상환 2년 연장



농림부는 2002년 구제역과 콜레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돼 다음달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관련, 대출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농가에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구제역·콜레라와 관련한 경영안정자금은 2002년 1천28개 농가에 305억원(금리 연 3%,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지원됐으며 2004년 6월 1차로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됐다. 이달 현재 대출 잔액은 23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농림부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해달라는 농가 건의에 대해 이미 한차례 상환기간을 연장했고 축산농가의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은만큼 50%를 갚은 농가에 한해 대출잔액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환 연장을 받은 농가는 2년 내에 대출잔액을 자유롭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환연장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환경규제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한우와 돼지 브랜드 경영체는 모두 73개가 됐다.

농림부는 이들 73개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위한 자금을 연리 3%,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들 경영체의 생산, 경영, 재무와 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 판매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 경영체의 내실화와 품질 균일성, 위생·안전성을 강화해 우수 브랜드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를 열어 우수 브랜드의 판로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는 한우의 경우 브랜드 경영체의 전국 사육두수 점유율을 2003년 17.4%에서 2013년 50%로, 돼지는 같은 기간 41.4%에서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지난해 브랜드 한우 점유율은 29.5%, 브랜드 돼지는 47.7%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농가 출하선급금 150억 지원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김운철)가 계통출하 활성화와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출하선급금을 운용한다.

축산유통부는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50억원 증가한 150억원을 운용하고 사업운용대상은 조합, 영농법인, 조합원 등이며 1년 무이자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금 운용을 희망하는 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지급



한우·돼지 브랜드 37개에 1천43억원 지원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 브랜드사업 추진심의회에서 올해 집중 지원할 24개 경영체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경영체 중 13개를 선정, 이들 37개 경영체에 1천4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농림부가 집중 지원하는 농·축협조합, 영농



신청서를 작성해 공판장으로 서면신청 하면 공판장은 조합에서 신청한 자료와 출하실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축산물공판장은 계통출하실적이 우수하고 출하성고가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나 공판장 출하 농가수가 많고 계통출하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관련 김운철 농협 축산유통부장은 "이번 출하선급금으로 출하조합은 약 7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 부분적으로 재개

아르헨티나 정부는 2달 반 정도 동안의 쇠고기 수출 중단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하였다.

수출업체들은 2005년 6월부터 11월 동안의 판매량 중 40%에 해당되는 양만 수출이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국내 쇠고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였다. 수출 중단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 쇠고기 가격이 30%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국민 1일당 쇠고기 소비량은 연간 약 65kg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소비자 가격 지수에 쇠고기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동안 12.3%의 인플레이션 증가 현상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쇠고기 가격 상승현상

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쇠고기 수출을 중단했었다.

아르헨티나의 2005년도 쇠고기 수출량은 2001년에 비해 무려 300% 증가하였다. 2005년의 쇠고기 수출량은 60만 톤(약 14억 불)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ow Jones Newswire]



중국 티베트·칭하이서 또 AI 발생

중국 서부 칭하이(青海)성과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중국 농업부 신문판공실이 5월24일 발표했다.

농업부는 귀뤄(果洛)티베트족자치주와 시짱 나취(那曲)지구에서 각각 철새들이 집단폐사해 국가AI참고실험실이 검사한 결과 폐사한 철새의 샘플에서 H5N1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부가 발표한 칭하이성 위수(玉樹)현의 야생조류 AI 발생 지점과 같은 철새 이동경로상에 있는 귀뤄와 나취에서 현재까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 조류 수는 큰 기러기, 황오리 등 모두 399마리다.

칭하이성 위수현에서는 4월23일부터 큰기러기 등 야생조류 123마리가 AI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5월3일 확인됐었다. 이번 AI 발생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희소하고 가금류를 사육하는 가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칭하이성에 있는 칭하이호에서는 지난해 5월 비슷한 시기에도 AI가 발생, 수천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㉟